

전체회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

일시: 2023. 10. 5.(목) 16:00-18:30

주관: 세계인권도시포럼 국제실행위원회

배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정의, 기후 행동, 평화 및 인권에 대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올해 UN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75주년 기념행사와 UN 사무총장이 발간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의제(Our Common Agenda)’를 통해 빈곤 완화 및 불평등 해소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도전과제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 이는 수많은 도시 및 지역 수준에서,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서도 분명해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인권에 대한 더욱 강화된 약속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약속은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UCLG-CSIPDHR)가 주도하는 ‘2030년 10, 100, 1000 인권 도시 및 지역(10, 100, 1000 Human Rights Cities and Territories by 2030)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더욱 잘 드러나고 확대되었다. 본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권 증진, 보호 및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 세계 100여 곳 이상의 지방정부가 함께 모였다. 이 캠페인의 첫 번째 성과는 불평등 해소와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을 향후 인권도시운동의 우선 과제로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지방정부는 지역 행동에 대한 교차적 접근을 통해 인권 증진이라는 의제를 다양한 차원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와 연계시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이미 시작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인권 기반 공공정책에 그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노동에 대한 접근성 제공,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주거 공간 제공, 기술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한 교육 접근성 제고,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이동성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정부라 할 수 있는 지방정부는 역내 정책에 인권에 대한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변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사회적 포용 및 돌봄을 위한 영감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왔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평등을 향한 길”을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의사결정과정, 정책, 행동을 지원하고 도시 및 지역 내 평등 증진을 위한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나갈 수 있었다.

따라서, 진전을 이뤄내면서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일부 지역의 정책이 확산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될 수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쳐 연대 의식 고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목표

1. 도시 빈곤과 불평등의 복잡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인권 관점에서 평가한다.
2. 지역 수준에서 평등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인권 기반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3. 인권을 바탕으로 평등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공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교류를 시작한다.

중점 논의사항

패널 1: 빈곤이 도시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와 지방정부 간 상호 논의를 통해 빈곤이 도시 및 지역에 미치는 다면적 영향과 주요 요인을 확인한다.

패널2: 도시 및 지역 평등을 향한 인권 경로

전문가와 지방정부 간 상호 논의를 통해 인권 및 인권도시운동을 바탕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경로를 모색한다.

